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철회…사법부 개혁엔 '고삐'

사법행정 정상화 TF 발족…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개편 공론화 정청래 대표 "국민 절대적 신뢰 있어야 독립 가능"…연내 법안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 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 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3일 간 담회를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 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 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 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 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 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 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 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 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 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며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또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법원행정 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 행 정위원회'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대 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 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 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 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이 법안은 입법에 이르지 못한 채 불발했다. 이 법안을 토대 로 법원행정처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 구상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 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 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부 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자 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 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 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 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 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년 60세→65세 연장 법안 연내 입법"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사회적 대화 공론의 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 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 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 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 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 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 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 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 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 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도 "정년 연장 논의 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 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 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 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 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 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광주시당, 정치대학 12일 출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역 보수의 정책역량과 현장 소통력을 높이겠다며 정치대학을 12일 오후 3시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출범한다고 3일 밝혔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총 6강을 진 행해 당원 대상 실전형 정치활동가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치대학은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학장을 맡아 운영한다. 강사진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 원,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 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시당은 강의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분 석, 정책 제안, SNS와 언론을 통한 대외 소통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말하는 보수'가 아니 라 '실천하는 보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욱 시당위원장은 "광주는 저항의 상징을 넘 어 책임과 비전의 도시가 돼야 한다. 진실을 말하 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로 호남 보수 재건의 개 척자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커리큘럼은 지역 정치 구조와 이념, 현대사와 가치, 전략 과제를 아우른다. 강연 주제는 호남 정 치의 구조적 문제와 다당제 경쟁의 필요, 보수철 학과 운동권 정치의 차이,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 에서 보수의 공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오늘의 시대정신, 호남에서 보수가 가야 할 길 등으로 구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냐"

"내년 선거 때 뭘 할지 봄에 결정…與와 합당 논의 없어"

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 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6 지사(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나' (라는 것인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테이블 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 논 의 자체가 양당 사이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 을 그었다.

이어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며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

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 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 책을 비판한 것을 자신이 반박한 점을 두고 일각에 서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데 대해 "어느 선거 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 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대위원장인 상태이 며, 선거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